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2 SINCE 1952

고품격 명품아파트의 기준! 승원팰리체
FELICE
www.승원건설그룹.com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39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1월 13일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성난 민심에 기름 부은 '윤석열 담화'

탄핵·수사 맞서겠다는 의지 표명
시민들 "국민에 선전포고" 분노
"당장 체포·탄핵 집회 더 강하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비판한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의원인 강명구 의원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12·3 계엄사태' 와 관련해 "내란 행위가 아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전국 거리 곳곳에서 '탄핵' 을 외쳤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계엄 선포부터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3·4·5·6면〉

특히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일각에서 제기한 하야 과정은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 수사와 정치권의 탄핵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계엄사태' 이후에도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그동안 재가하는 등 대통령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여전히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들은 "탄핵 필요성을 본인이 증명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탄핵의 수위를 높여갔고,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도 "빠른 탄핵"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면서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다" 덧붙였다.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위헌·내란 논란에 윤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고,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통치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또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야권으로 돌리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는 점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았고, 27차례 발의된 특검 법안과 정부 공직자 탄핵도 '정치 선동 공세' 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제21조 1항)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하고, 국회 의정활동을 모두 정치 선동 공세로 몰아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와 경찰·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계엄군 간부들의 증언과 국무위원들의 증언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했다.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TV와 유튜브를 통해 계엄군의 무력 국회 진입, 경찰의 국회 봉쇄 등을 생생히 보았지만, 이를 모두 부정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질서 유지' 였고, '느슨한 계엄' 으로 '계엄 효과' 를 얻고 피해는 최소화 했다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진입에 대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총선 부정선거' 를 강조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담화는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 "내란 자백" "다음엔 발포 명령"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즉각 SNS를 통해 "지금이라도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 시장과 광주 5개 자치구청장들은 국정지표 액자 자체를 집무실에서 치웠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오월단체, 종교계와 교육계 등에서도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탄핵' 촉구를 더욱 강력하게 해나가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내부 탄핵 찬성여론 확산

의원 10여명 표결 참여 의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전해진 1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 했고,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도 추가됐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종오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계엄 사태가 저와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 표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장동혁,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김소희 의원 등 10여명이다. 이 중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박정훈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며 2명만 더 추가되면 야당이 발의한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돼 투표가 성립되고, 여당에서 찬성이 8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을 정당화하면서 20여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비윤계 의원은 물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설득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 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김건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반대 당론' 이탈표 속출

'12·3 계엄사태' 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됐고,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또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